

30층 이상 아파트 ‘우후죽순’...무등산이 점점 안보인다



광주 도심 곳곳에서 무분별하게 고층건물과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무등산의 경관을 가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 경관 대원칙 안 지켜 고층건물 ‘쑥쑥’... 화재대책 부실 전체 가구의 77.8%가 아파트... 획일적인 ‘성냥갑 도시’ 우려

광주시 경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무등산을 볼 수 없는 구조’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30층 이상의 높은 건물과 아파트들이 광주지역 곳곳에 들어서면서 ‘광주 어디에서나 무등산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광주시의 경관 대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건물 외형이 비슷한 아파트를 중심으로 대형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어 ‘어느 구, 어느 동에서 창문을 열어도 볼 수 있는 풍경은 아파트 숲밖에 없다’는 점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숙제다. 또한 이들 고층건물에 대한 광주시의 화재대책도 부실하다.

몇 년 사이에 무등산을 바라보며 광주 도심을 걷는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지역이 줄어들고 있다.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고층 건물 탓이다. 시대의 변화와 도심 발전에 따라 고층건물이 건립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광주지역 고층건물들은 ‘바다 위 섬’처럼 곳곳에서 외따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무등산만이 아니라 경관거점인 광주 진출입구, 대로변 등에도 어김없이 아파트가 들어섰다.

1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광주시의 경우, 고층건물이 최근 들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은 것까지 포함하면 170동에 달한다. 이미 입주가 마무리된 9개의

고층건물들은 착공 전부터 ‘무등산을 가린다’는 일부 시민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공사가 강행됐다.

특히 학동과 계림동 등 무등산 인근인 광주 옛 도심 일대에 고층건물이 들어섰거나 공사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이들 지역은 주변에 다른 높은 건물이 아예 없거나 적은 지역이다 보니 신축 고층건물들이 더욱 두드러지게 눈에 띈다. 도심 경관을 아름답게 디자인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전혀 맞지 않는 풍경이다.

또한 공사중이거나 미착공한 고층건물들도 광주 전 지역에 퍼져 주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동떨어진 ‘마천루’ 형태로 조성되고 있다는 점도 광주시 경관 관리의 큰 문제점으로 손꼽힌다.

◇성냥갑 형태만 남은 광주 경관=광주시는 아파트 증가세가 다른 대도시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면서 도심 경관도 전면일률적인 ‘사각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광주의 아파트 수는 모두 38만5000호로, 전체 가구 49만5000호의 77.8%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평균(60.1%)보다 무려 17.7%p 높은 것이다. 서울(58.0%), 부산(63.9%), 대구(69.9%), 인천(61.4%), 대전(72.4%) 등 다른 대도시는 50~70% 초반을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광주의 단독주택 비중은 8만7000호로 17.2%에 불과했다.

이처럼 광주의 아파트 비중이 큰 것은 2000년대 이후 재개발, 재건축 등에 의해 구도심, 그리고 지구 단위계획에 의해 도심 외곽 등 도시 전체에 아파트 공급이 무분별하게 이뤄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앞으로 도시정비사업으로 6만호,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7만호 등이 예정돼 있어 광주가 아파트로 뒤덮일 전망이다. 높은 아파트 비중은 획일적인 도시 경관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

지역에 30층 이상 높은 건물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지만 고층건물의 대응 대책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과 부산 등지는 관련 화재 진압 장비를 갖춘 전문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전담팀은 물론, 고층화재 진압장비도 없다.

현재 광주시소방본부에는 각 소방서마다 고가사다리차 1대와 굴절차 1대씩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장비는 최대 17층까지만 쓸 수 있는 반면, 서울과 부산시는 높이 70m, 23층 건물에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고가사다리차를 보유하고 있다. 인천시도 내년도에 고가사다리차 2대를 구입할 예정이며 고층화 추세에 대응해 각 지자체가 일반 펌프차에 비해 성능이 뛰어난 고성능펌프차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추세다. 무분별하게 고층건물의 허기만 내주고 화재에 대해서는 적절한 준비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무분별 고층건물에 화재 대응도 부실=광주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 고층건축물 현황(건축허가 포함)

연번	구분	건물명	층수 / 동	비고
1	공동주택	학동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8~35층/11동	준공
2	공동주택	남양휴튼2차 아파트	32·30층/2동	준공
3	공동주택	화정동 힐스테이트(1단지)	19~33층/8동	준공
4	공동주택	화정동 힐스테이트(2단지)	18~33층/7동	준공
5	공동주택	화정동 힐스테이트(3단지)	15~33층/20동	준공
6	공동주택	상무 광명메이루즈	31층/4동	준공
7	업무시설(오피스텔)	중흥 스카이31	30층/1동	준공
8	업무시설	금호생명보험	30층/1동	준공
9	공동주택	계림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34층/19동	착공
10	공동주택	양산동 주상복합	39층/1동	공사중
11	공동주택	휴먼파크 서히스타힐스 조합 아파트	27~35층/8동	공사중
12	공동주택	각화지역주택조합 아파트	16~31층/9동	공사중
13	공동주택	유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34~37층/4동	공사중
14	공동주택	각화동 484-1 일원	37~39층/7동	공사중
15	공동주택, 판매시설	광주 호반 씨잇플레이스	48층/1동	공사중
16	업무시설(오피스텔)	트윈시티 오피스텔	37층/1동	공사중
17	공동주택, 오피스텔	휴먼파크 서히스타힐스	27~35층/8동	공사중
18	공동주택, 오피스텔	각화지역주택조합	16~31층/8동	공사중
19	공동주택, 오피스텔	쌍암동 주상복합	30~43층/10동	공사중
20	공동주택, 오피스텔	센트럴파크서히스타힐스	28~39층/7동	공사중
21	공동주택, 오피스텔	쌍암동 주상복합 아파트	30~34층/10동	공사중
22	숙박시설	치평동 숙박시설 신축공사	31층 / 1동	미착공
23	공동주택	치평동 주상복합	36층/1동	미착공
24	공동주택, 오피스텔	임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39층/13동	미착공
25	공동주택	우산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31층/15동	미착공
26	공동주택	주월지역주택조합아파트	36층/2동 33·35층/1동	미착공

(광주시의회 제공)

‘김정은 자산동결’ 제외...대북제재 완화

유엔 안보리 오늘 오전 표결, 원유도 단계적 금지로 ‘절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1일 오후(현지 시간, 한국시간으로는 12일 오전)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애초 미국이 제안한 결의안 초안에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처음으로 제재 명단에 올리는 것을 포함해 대북 원유공급 차단, 섬유·의류 수출 금지 등 초강력 제재안이 망라됐으나 러시아, 중국과의 물밑협상 결과 이보다는 완화된 내용이 담겼다고 AFP, 교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전했다.

AFP와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당초보다 완화된 내용으로 결의안 최종안을 마련해 현지시간으로 10일 오후 안보리 회원국들에게 회람시켰으며, 11일 오후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종안에는 개인·단체 제재대상 명단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름이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미국이 공개한 결의안 초안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이름이 처음으로 올라 주목을 끌었다. 제재 대상이 되면 해외 자산이 동결되고 여행이 금지된다. 김 위원장의 해외 은닉 재산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제재는 실질적 효과보다는 상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됐다.

로이터통신은 “초안에서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등 총 5명이 제재 명단에 포함됐지만 최종안에는 제재 대상이 단 1명으로 줄었다”고 전했다.

북한 해외노동자와 공해 상의 북한 선박 강제검색 관련해서도 내용이 다소 완화됐다. 반면 북한의

섬유제품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은 애초 미국의 제안대로 포함됐다. 섬유는 석탄 등에 이어 북한의 주력 수출상품 가운데 하나로 연간 수출액이 약 7억 5200만 달러(약 8500억원) 규모다.

김정은 자산동결과 함께 북한의 ‘생명줄’을 끊는 조치로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대북 원유 및 석유제품 금지는 전면금지가 아닌 단계적 금지 쪽으로 절충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통신은 “안보리 결의안 최종안은 원유 수출에 대해서는 연간 상한을 설정하고 과거 12개월의 수출량을 초과해서 안된다고 명기했다”고 보도했다. 또 “북한에 대한 모든 석유 정제품의 공급과 수출을 합쳐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하기로 했으며, 가맹국에 대한 수출량 등을 매달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이는 원유 전면 수출금지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면서 대북 원유 공급량을 실질적으로 줄이도록 하는 일종의 ‘절충안’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각국에 북한으로부터 파견된 노동자의 취업 허가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천연가스액과 천연가스 부산물의 경질원유 응축액의 수출도 금지된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표결은 한국 시간으로 12일 오전에 행해질 예정이다. 결의안이 채택된다면 미국·중국·러시아·프랑스·영국 등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상황에서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연합뉴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대학
GREAT CHOSUN HUMAN UNIVERSITY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3년 이상 재직중인
당신을 위해
조선대학교가 새롭게 준비한
장미빛 프러포즈,

100세 시대! 새로운 인재를 위한
조선대학교 미래사회융합대학

✓ 無수능
✓ 無시험

2018학년도 조선대학교 수시모집

전형방법	면접(50%) + 학생부(50%)
전형일정	2017. 9. 11(월) ~ 9. 15(금)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 www.chosun.ac.kr
입학문의	조선대학교 미래사회융합대학 교학팀 전화 062-230-7970 / 팩스 062-234-3015 홈페이지 www.chosun.ac.kr/future

FUTURE. SOCIETY. CONVERGENCE.